12일 Market Index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금리(국고채 3년) 2.431 (+0.011)
환율(원·달러) 1395.40 (+3.6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국회·IMF로 번지는 금감원 사태 출범 26년 만에 총파업까지 검토

금융감독조직 개편 갈등

노조, 공공기관 지정 반발
"독립성·효율성 무너진다"
IMF접촉·총파업 논의까지
18일 국회 앞 집회 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주 금감원 노조는 출근길 시위와 이찬진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 국회 앞 집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 접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 논의에 착수하며 사태는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초유의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진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이 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중복·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결국 예산과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해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독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히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금감원 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세부 대응 방안 없이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쳐 노조 내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반발이 거센 상태다.

노조는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례 없는 총파업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예정된 IMF 연례협의에 맞춰 독립성 훼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전달은 무산됐다. 대신 비대위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국회와 정당을 직접 찾아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IMF에 별도로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낮 12시5분부터 열리는 이번 집회에서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정무위 국면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무너뜨리는 퇴행적 기획"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단절시키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흔들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쌀 한 가마에 22만원 돌파 쌀 가격이 한 가마당 22만3000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2만5000t의 정부양곡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쌀을 고르는 모습. /뉴시스

그는 "금소원 신설은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도 짙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 축을 억지로 쪼개 재조립한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독립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국제 신인도와 투자자 신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노조의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美 관세협상, 투자모델 갈등에 장기전 조짐

美 '일본식 수익배분' 압박에
김정관 "모두 수용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지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m-커버스토리

고물가·저출산에 내수 한계 내실경영·디지털 전환 사활

새 판 짜는 유통가

수익 낮은 점포 정리하고
핵심 점포로 효율화 꾀해
무인결제 등 DX투자 확대

국내 유통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와 온라인 쇼핑 확산,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의 공세까지 겹치며 내수 성장에 한계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외형 확장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업계는 내실경영과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업태 진화 등 각기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초 업계는 '내실경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형 유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점포를 리뉴얼하며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AI·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무인 결제, 스마트 물류 등 디지털 전환 투자를 확대하며 고객 경험 개선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공급망 최적화와 친환경 경영 강화도 빠지지 않는다. 자동화 물류센터, 친환경 포장재, 로컬 소싱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 한줄뉴스

▲한정애,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 "가정법원도 존재, 무슨 문제인가"
▲이언주, 文·이낙연 환대 사진에 "정치적 해석 알면서" 비판 /사진 뉴시스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교회' 찾아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
▲국힘,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하겠다는것"
▲한동훈 "우 의장, 李 기다렸다 계엄 해제 표결"…우원식 "의원 안 해봐서 몰라"
▲조국혁신당, 비대위 구성 완료… "과반이 여성"